개혁장관도 후퇴… 투쟁 불가피

새 노동법 고용불안·교섭력 약화 우려

정기국회 맞춰 개최…노동법개정 촉구

노동자대회 무엇을 결의했나

'지난 군사정권하에서 왜곡된 각종 노동행정지침을 바로잡으려는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노력에 환영하는 바이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지난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정부와의 점예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

전노협, 현총련 등 전국의 민주노조 대표자들이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새로운 공동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6월1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공식반족시킨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의 성명내용 중 일부이다.

새정부 출범후 이인제 장관의 노동행정 개혁방침(해고노동자 전원복직, 전노협 합법화 등)은 이처럼 민주노조진영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민주노조진영(즉 전노대)은 '연내 노동법 개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문제는 개정의 폭'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렇던 전노대가 지난달 31일 효창운동장에서 '93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측에 노동법개정부명을 선포했다. 7월 29일 입법예고된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노동부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내년 적절한 시기'로 연기해 노동법 개정에 대한 시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예년의 노동자대회가 그 한 해의 임금인상투쟁을 정리하는 자리였다면 예년에 비해 10여일 정도 앞당겨져 실시된 올해의 노동자대회는 정부의 노동법개정 연기발표에 따라 정기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대회를 갖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천명하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노동법개정의 연기 발표와 함께 근로자 파견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월차휴가 폐지조항 등 새로운 노동법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근로자 파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중간에서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사용업체에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일종의 사고파는 행위이다. 이 법조항이 시행될 경우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정규직 노동자를 점차 파견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가 서로의 생계를 걱정해 경쟁관계에 놓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며, 파업 등 단체행동시 파견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역시 현행 노동법의 독소조항으로 분류되는 법안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기금의 조성은 월급에서 2%, 퇴직금에서 2%를 강제로 각출하고 임금후불성격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2%씩을 모으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다시말해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순수 민간자금인 것이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기금의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92년 중앙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액수이다.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과 재정개혁을 위해 이 기금을 재정자금으로 전용충당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조항이 바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전노대는 이번 노동자대회를 그해 노동운동을 정리하는 형식에서 탈피시켜 하반기 노동법 개정투쟁의 사전 결의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노대는 올 상반기 있었던 현총련투쟁, 직업병과 직장폐쇄에 맞선 원신 노동자들의 투쟁, 구속·수배·해고자 원상회복을 위한 전해투 노동자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노동자들간의 연대가 부족했다고 밝히고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노대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계속적으로 거론되었던 노동법개정은 단순히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개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노동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사회개혁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현장에의 3자개입 금지법, 복수노조 금지법,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 배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노동법으로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노동인법국가로 구분되어 있다.

"노동자의 지주적 단결권 보장은 바로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이다. 이절 하지않겠다는 현정권은 문민정부도, 개혁정부도 아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노동자가 노동법 개정투쟁을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실질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권영길 전노대 공동의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단결은 이 나라의 앞날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특집부〉

현장최재 —전국교사 대회

"교육민주화 현장서 실천"

지난 7일 단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현직·해직교사와 가족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주최로 열린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가입 기념 및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는 지난달 15일 있었던 전교조의 교육부방침 수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말해주었다.

"교육부의 '선탈퇴 후복직'방침에 따른 이번 해직교사의 복직"은 어디까지나 학교현장에서 교육개혁과 참교육의 실천을 위한 제기일뿐 '교육의 민주화'라는 근본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란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의 대회사는 더 이상 학교 밖에서 명분과의 싸움으로 참교육실현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해직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러한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사대회 전에 있었던 사립 및 국·공립 교장단의 복직반대와 철저한 선별복직 주장은 학교현장에서의 진정한 교육개혁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다. 내년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사학 및 사회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1백34명과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자 31명의 복직문제, 해직기간동안의 호봉인정 문제, 더나아가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가 남게 되었다.

◇전교조가 지난 7일 단국대에서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가입 및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합법화·참교육 여전히 유효한 과제

이에 교사들은 국민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한 지금 해직교사들의 복직국면을 맞이하여 전교조의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결의, 교육개혁의 핵심적 주체로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여러 공약을 내놓았던 김영삼정권의 교육개혁이 한계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입장을 양보하면서 하나의 매듭을 풀었던 전교조는 앞으로 교육운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교육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사대회에 참가한 해직교사들의 얼굴에는 복직에 대한 기쁨보다 교단에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더 기대하는 모습이 선명했다. 〈신청식 記者〉

강단시론

윤 명 선
〈법대교수·법학〉

정치관계법 개정의 방향

문민정부가 들어서지 8개월여, 그 동안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금융실명제의 실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부정·부패의 척결 등을 실시해 왔다. 지난 30여년간 군사문화 속에서 자라온 부정·부패와 부조리,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람이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다. 21세기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패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중지를 모아 현명한 처방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개혁은 과거청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인치적 성격이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단편적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정치개혁이며, 이를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기 총회를 맞이한 국회는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른바 통합선거법인이 각 당에서 제시되었고 '성의 자금법은 음성통로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과 정당 후원회의 회계보고의 형식화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고보조금·기탁금·후원회비·당비 등의 형식으로 정치자금이 조달되고 있는데, 기탁금과 후원회비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 상한선을 규정하여야 한다. 선거공영제의 실시를 위해 국고보조금은 사용하되, 정당운영비의 보조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당내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당원의 당비에 의한 정당운영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로, 정당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당내민주화, 이것은 민주정치의 대전제이다. 과두제식의 정당운영을 탈피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의 지구당 선출방법 등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흑백논리와 실력 대결로 일관되어 온 전근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책정당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분화된 다양한 사회세층의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 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체'(정사협)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입법청원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하튼간에, 이제 정치권은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국회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정치의 선진화—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해 사회개혁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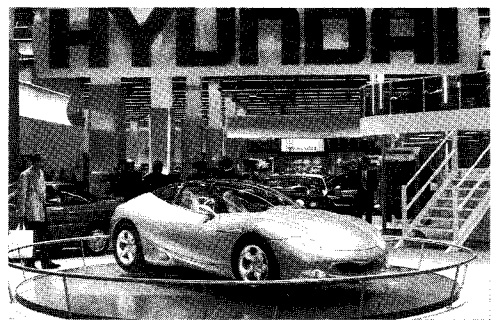
첫째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각종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선거공영제를 확대 실시하여 법정선거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선거운동기간은 단축시킨다. 그 대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선별적으로 특정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도록 한다. 선거구 확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고 전국구의석배분에 있어서 직능대표제·비례대표제의 원리를 확대실시하여야 한다. 이제는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선거법이 도출되어야 하겠다. 특히 선거법은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선거운동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연좌제의 도입 포함—을 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선거사범의 법적 처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신청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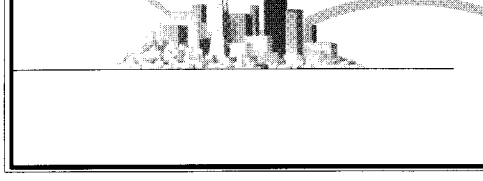
둘째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종래 정치교원·언론인 등에 대한 정당활동의 제한은 완화되어야 하고, 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에 대한 자격박탈문제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로, 국회법도 그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입헌주의의 믿음 희망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지출성의 보장, 효율적인 국회운영, 소수파의 보호, 국민의 입권리와 입법참여의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당적이탈, 상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사무처 특히 입법보조기구의 확충 등을 통해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수파에 의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 및 국회의원 개인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공개·속기록의 작성, 시민의 청원요건 완화, 공청회·청문회제도의 활성화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위한 대전제이며,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국가상, 이는 권력남용의 방지, 부정 부패의 척결, 기본권의 보장, 정의사회의 실현 등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혁은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입법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이와 같은 법개정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혁의 성패 여부는 제도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인간—그 의식—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적극적인 참여', 즉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도쿄에서 디트로이트로…다시 프랑크푸르트로!





해외시업무 수출상담계획팀
조 용 정

"그곳에선 세계 자동차들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디트로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동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세계 자동차들과 당당하게 겨루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랑스런 모습까지도.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의 수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세계 3 대 모터쇼!

높은 급여, 복리후생 다 좋지만
큰회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것
그것이 얼마나 큰부가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 멋진 기회였습니다.
입사 3 년차의 사원에게 이런 기회와
도전에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해준
나의 회사, 현대자동차.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